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자료집

2020년 8월 21일(금) 13시~15시 30분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

주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전체토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참가자 전원

기조발제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¹⁾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난 '한국판 뉴딜'의 총평(<경향신문> 연재 칼럼, 2020. 8. 7.)에 이어, 이번에는 '디지털 뉴딜' 논의를 좀 더 집중해 다뤄보고자 한다. 향후 5년에 걸쳐 투여되는 114.1조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 가량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소요된다. 신규 일자리 190만개 가운데, 90만개 고용 창출까지 기대한다. 전체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규모만으로도 좀 더 속고가 필요한 정책 영역이다.

코로나 국면 성장의 그늘

지난 8월 11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해 -1.2%에서 -0.8%로 상승해, 37개 회원국 중 성장률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한다. 공격적인 코로나19 방역 효과 덕이라. 통치권자는 물론이고 주류 언론과 정치권은 이 숫자에 크게 고무됐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 안에는 우리 사회의 우울한 지표들이 나란히 거론되고 있다. 삶의 질, 포용성, 양극화, 사회안전망 위기, 고령화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된 우리의 고질적 사회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물론 이들 지표는 '성장률 1등 국가'의 실적에 가려 그리 큰 논의 거리가 되진 못했다.

가령, 보고서에서는 노인 빈곤 비율,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들에서 가장 크다. 자살률은 십 년 전에 비해 갑절 이상으로 늘었고, 최근 수년간 1위다. 삶의 행복 지수들, 환경의 질, 건강 상태, 사회적 연결 감각 등은 최저 수준이다. 우려했던 것처럼, 국내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로나19 국면 노동시장 고용충격과 노동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임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의 노동권이 위태롭다고 지적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인류 재난의 복구와 '회복력'을 되찾기 위해, 어느 누구도 재난 이전보다 삶의 고단함이 더 밀려드는 상태들로 다시 돌아가는 이른바 과거 회귀의 길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국민에게 요청하는 '새로운 합의(뉴딜)' 내용에는 보고서에 드리운 그늘에 대한 극복 논의가 별로 없다. 뉴딜의 종합계획은 디지털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 과거 '정상 성장경로의 회복'에 매달린다.

1) 이 글은 이번 간담회 기조발제 준비 겸 <경향신문> 개인 연재글(9. 4일 금 게재)을 위한 초고본으로 쓰였습니다. 신문 게재 전 인용이나 전제는 연재일 전까지 삼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

지난 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들여다보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이자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건설이 국가 '디지털 뉴딜'의 정책 슬로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댐 건설, 지능형 정부 등),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온라인 교육 및 인프라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 등)라는 4대 분야의 12개 세부 과제 형태로 이뤄져 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가운데,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그 중 3대 핵심 사업에 꼽힌다. 먼저 '지능형 정부' 과제는,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정부 전산망 정비부터, 90년대 중반 이후 10 여 년간 초고속국가정보망 구축, 참여정부 시절 이래 '종이 없는' 행정 체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가 정보화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 정보화 사업에 비하면, 지능형 정부 과제가 한국판 뉴딜 아래 놓으면서 외려 규모가 쪼그라든 느낌마저 든다. '지능형 정부'로의 역사적 배경에는, 대국민 주민등록 정보 관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전산)화'(박정희 군부 이래), 중앙 집중형 서버의 데이터 통제력을 강조하는 '네트워크화'(전자정부' 추진 이후), 그리고 현 정부의 대민 '소셜' 데이터 알고리즘 분석 및 패턴 인지의 '지능화' 단계로 향하는 국가 기술통치 체제의 질적 변화가 놓여 있다. 국가 통치의 지능화 국면은 지난 해 12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발표로 공식화된 측면이 크다.

다음으로,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은 비대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기획돼 있다. 코로나 국면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습성을 보여주는 '뭉쓸' 정책 과제다. 코로나 국면에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국내 엘리트들이 원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알 박기' 하듯 끼워 넣은 항목이 '스마트의료'로 판단한다. 이는 현장 전문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대라는 감염병 재난 시대의 교훈을 읽어내는 것과 꽤 어긋난 행보다. 공공의료 기반 확충 대신 소위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라는 미증유의 선택을 취했다.

총사업비 가운데 단일 과제로 가장 큰 국고가 투입되고, 일자리 창출 기대감이 가장 큰 영역이 '데이터 댐'이다. 종합계획 보고서는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일이 '데이터 댐' 사업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수력 발전을 위해 댐에 물을 가둬 관리하듯,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은유적 표현이다. '데이터 댐'의 핵심은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사기업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데 모인다.

디지털 뉴딜의 근본 오류들

정부의 디지털 뉴딜이 추구하는 '데이터 댐' 등 디지털 경제를 향한 열광과 투자 계획은, 마치 코로나 19에서의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 상황을 '뉴노멀'의 새롭게 굳어버린 일상으로 받아들인 채 비대면 D·N·A 비즈니스에 국가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성마른 무모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과 유사한 감염병들의 또 다른 창궐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생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의 관점에서 상호 물리적

대면의 호혜적 인간관계를 준비하는 국가의 일이 비대면 현실에 순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이란 재난 추수주의적 목표가, 자칫 바이러스 상황에서의 상황 오판에 기댄 경제 목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를테면, 정부가 뉴딜을 통해 비대면 산업을 강조하면서 대면의 신체 노동을 업으로 하는 사회 약자들과의 호혜적 관계 상실과 사회 양극화를 의도치 않게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치 '그린 뉴딜'을 탈탄소 국가 대전환 플랜이기 보단 일종의 '그린 비즈니스'로 축소해보듯, 정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디지털 뉴딜의 최대 목표치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도출됐는지 의아스럽지만, 5년 이내 43조원의 데이터 시장 이윤 창출이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 목표다. 수개월 전 한창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그릴 당시 "그린뉴딜"이 상위 개념이 되면 디지털 혁신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현했던 주류 산업계의 반응이나, 연초 '데이터 3법' 통과시 민관 모두 거의 일치된 데이터 산업 활성화론을 주장했던 상황을 떠올려보라.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첨단기술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기조가, 이제 또 다시 디지털 뉴딜이란 거대 국고 투자와 추진과제 형태로 구체화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문제는 이렇듯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중독 증세는 시장 바깥과 맺는 우리 인간 사회와 생태 미래의 삼투압 효과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데 있다.

디지털 뉴딜의 이와 같은 디지털 선도 '경제(지상)주의적' 목표값은, 국민 데이터 활용 대 보호라는 딜레마적 상황을 아예 노골적으로 벗어났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소위 디지털 국부론 그 자체를 무조건 문제 삼자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데이터 댐' 축조라면, 시민(빅데이터 일상 감시), 노동자(플랫폼 노동 통제), 소비자(소비활동 데이터의 사적 포획)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개별 국민들의 데이터 오남용과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살펴야 했다. 하지만, '데이터3법' 통과로 인해 정보인권의 운동장이 크게 기울어진 상황이다, 급기야 이번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계획은 우리 국민의 삶 활동 대부분을 시장 데이터로 사유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뉴딜 '데이터 댐'의 붕괴 위험

'데이터 댐'을 직접 구축할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많은 의혹을 자아낸다. 향후 5년간 총 39만 개의 '디지털 댐' 일자리 가운데, 현재 일자리 창출의 주된 부분이 '데이터 레이블링' 등 지능형 알고리즘 분석을 돕는 단순 보조 허드렛일에 해당한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디지털 뉴딜의 사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일종의 '공공취로형 데이터 댐' 건설에 고학력 청년들을 동원하는 모습만 크게 눈에 띈다. 사태의 이런 흐름은 '사회 안전망' 마련과도 무관해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플랫폼 알고리즘 매개형 배달·돌봄 일자리들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 비춰보면,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사업 육성이나 '데이터 댐'의 청년노동 일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 디지털노동의 양산에 가깝다.

'데이터 댐'을 유지할 데이터 관리 방식도 문제다. 사업 계획에는 14.2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즉각 개방한다는데, 이들 숫자가 주는 의미가 뭔지 파악이 어렵고 그 질적 가치 또한 어떠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데이터 개방'을 단순히 공적 데이터를 낱것 그대로 많이 생산해 개방해 내놓으면 필요한 수

요가 창출될 것이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는 듯하다. 기실 데이터 개방이란 시민들이 함께 이를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즉 시민사회를 위한 '공익' 데이터 혹은 '공유(커먼즈)' 데이터의 공동생산과 관리까지 내다보는 정부의 촉매자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데이터 댐'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면서 범국가 단위의 정책 수립과 데이터 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조만간 마련된다고도 한다. '데이터 댐'의 기초는 민간이 쓸 수 있는 데이터 개방과 확보는 물론이고, 부처와 기관 사이, 공공과 민간 기업 사이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늘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흠어진 데이터 결합이란 전제는 의당 옳은 듯 보이지만, 늘 정보 오남용의 위험 또한 안고 있다. 가령, SOC 디지털화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확대하려 하다보면, 방역, 교통, 방법, 범죄, 재난, 위치정보 등 서로 다른 부처·민관 데이터가 통합되고 결합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 결합 통제력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합쳐지고 포개질수록 데이터의 상황 통제력이 높아지나 그만큼 시민들의 '제로 프라이버시' 상황을 이끌 위험성이 공존한다. 시스템 보안과 외부 침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독립 분산형 데이터 네트워크 모델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술의 시민사회적 재설계

이번 정부 들어서, '포용 성장', '사람 중심', '사회 안전망' 등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기 위한 개념들이 미사여구처럼 쓰이다 맥없이 잦아드는 현상을 자주 본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곳곳에 이들 개념들이 디지털 성장론을 덧칠하는 배경처럼 활용됐다. 수사학적 개념 이상으로 이들이 정책 언어의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질 못하다. 디지털 뉴딜의 약자 포용성, 사람 중심의 데이터 기술 설계, 대면 사회적 관계 감각을 키우는 디지털 사회 전망, 사회안전망으로서 '데이터 댐' 일자리 등은 정말 디지털 뉴딜 정책에 어울리지 않는 과제들일까?

매번 계측된 경제 생산성을 성장의 지표로 찾는 자본주의적 성과 측정의 관행에서 우린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가령,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시민 공동체들의 다양한 기술 매개형 시민 실천인 '시빅 해킹'이나 '비판적 제작'의 사회공학적 디지털 기획들은, 직접적으로 시장 지표적 성과로 측정되지 않지만 시민들 자신의 기술 자산이자 공통 재화를 만들어내는데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다. 지금의 디지털 뉴딜은 고답적 실물경제 성장의 틀 안에 갇힌 채 우리 사회의 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점에서 탈락된 약자 배제적이고 기술 지향에서도 굴절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의 추진 체계에서 보듯, "범정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면서, 가장 다수 시민의 주체적 역량은 왜 늘 빠져 있을까? 국민과의 합의가 사라진 자리에 '뉴딜 펀드'라는 희한한 민자 유치 사업만이 요란하다. 한국판 뉴딜 발표 이래 시민이 정책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가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나 사야한다는 점에서 서글프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원금 보장에 3%대 금리, 거기다 불공정 절세 우려까지 낳을 수 있는 세제 혜택까지 보장한다고 홍보한다. 국가가 직접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나서서 투자 원금 보장, 금융과 절세 혜택까지 주며 손실위험을 회피하도록 하는 일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큰 쌈짓돈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뉴딜펀드는 덧없다.

사실상 수 억 단위 자금을 굴리는 소수 투자자들에게나 해당할 민자 유치 상품은, 뉴딜을 통한 '국민 재테크'라기 보단 여윌돈 지닌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고금리 절세의 투자 상품 호객에 가깝다.

여윌돈을 지닌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뉴딜펀드'나 시민 공동의 데이터 이익까지 기업 사유화하려는 '데이터 댐'의 기획을 넘어서려면, 시민 공동의 커먼즈 데이터 모델의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꾸리는 플랫폼 노동조합 등 자율 결사체 조직의 자율적 흐름이 필요하다. 정부의 '뉴딜'에는 기업에 대한 배려에 비해 기술 협력의 시민상을 키우기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적 구상이 보이질 않기에 그러하다.

이를테면, 시민들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개하는 오픈소스형 데이터 지식, 이론, 노하우, 사례 등의 축적된 경험들을 그들 자신의 호혜적 가치로 연결하는 정보·지식 커먼즈의 플랫폼 시민 공동체적 구상도 기대해볼 만하다. 데이터 생산 주체로서의 시민들과 함께 새롭게 합의할 수 있는 사회 대전환의 '뉴딜' 의제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끝>

주제발표 1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주제발표 2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1. 상반된 시선

◆ 코로나19 가 되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대감

- ✓ 코로나 19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 확산, 그린 경제 활성화 등을 가속화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 역시 다시 주목받기 시작



1. 상반된 시선

◆ 코로나19 가 되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대감

- ✓ 빅데이터의 활용 영역은 매우 다양 '건강' 이나 '의료' 분야는 AI 기술을 접목하여 나온 가시적 성과들* 많음

* 암진단보조 프로그램 Watson,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 ✓ 생명과학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가져다 줄 경제 성장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기대도 증가

* 전세계 경제규모 80조 달러 중 의료보건산업비중 약 8조 달러(10%)



1. 상반된 시선

◆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

- ✓ 빅데이터 개방 위험성에 대한 비유 사례(칼럼)

한겨레(20.5.28) '신파우스트, 당신은 왜 나를 궁금해 하지요?' (신영전 한양대 교수)

(그레트헨) 당신은 왜 나를 궁금해 하지요? 내가 불안증과 위염이 있고, 어제 약국에서 피부염 연고를 산 것 까지 왜 알고 하지요?

(메피스토펠레스)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참, 당신은 성형수술도 받았더군요.

(그레트헨) 이 나쁜놈! 질병정보처럼 개인적인 것을 당신에게 넘겨주는 것을 정부가 허용할 리가 없어요!

- 하 력 -



1. 상반된 시선

◆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

- ✓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 (금융이나 교통 등과는 또 다른 문제)
- ✓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민감한 정보를 민간기업까지 개방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출된다면 심각한 위해
- ✓ 20.7월 발표된 정부 뉴딜 정책에는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은 불명확

2. 정책 평가

◆ 형식적인 국민 중심의 데이터 수집 · 활용

- ✓ 정부는 '19년부터 My Data*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 설정

*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개인이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려는 것처럼 보임

정보주체인 환자가 검사영상이나 진료기록 사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병원에 비용 지불

2. 정책 평가

◆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부족

- ✓ My Data를 통해 국민들은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들을 한 군데 모아 열람하고, 필요시 민간에도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주요서비스 : 은행, 카드, 금융투자, 보험, IT, 핀테크 (출처 : 금융위원회)

- ✓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정보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이 험값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

2. 정책 평가

◆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부족

- ✓ My Data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이 동의한 경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방식
- ✓ 결국, 보험사나 제약사 등의 빅데이터 개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성격이 강함

“디지털 뉴딜 진단”(20.7.21., 참여연대) “국민의 데이터를 기업이나 산업계에 제공하여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

3. 활용 방향

◆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 제한

- ✓ 민간사업자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례*가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실명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은 제한 필요

*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3,500만명 11.7월) 농협 등 카드 3사(1억 400만건, '14.1월), 홈플러스(5만명, '19.9월) 등

3. 활용 방향

◆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

- ✓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
- ✓ 장기요양보험 도입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긴 결과, 빠르고 충분한 공급자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점차 질이 저하되고, 영리화 되어 뒤늦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원 투입 중
- ✓ 민간에 서비스 개발을 명목으로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 시, 보건 의료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영리화 되고, 건강불평등 양산 가능성 높음

3. 활용 방향

◆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

- ✓ 공공에 이미 우수한 서비스들이 많으며, 일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추가 결합하면 더욱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IN” 앱은 개인의 진료 및 국가건강검진결과 정보 제공, “똑건UP” 앱은 만성질환자가 혈압·혈당 측정치 등을 저장하고 검진·진료 기록과 연계하여 주치의가 상담 및 처방에 참고하도록 지원

3. 활용 방향

◆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는 익명정보만 활용

- ✓ 민간보험사의 상품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개방은 절대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정책 평가나 제품개발은 익명화된 정보에 한해, 연구 목적을 충분히 심의 후 제공 필요

전국민 데이터를 수집 통합관리하는 핀란드도 민간 영리 목적으로는 제공 안함

- ✓ 데이터 3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보보안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고 그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이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

* OO 공공기관의 경우,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유료 제공

3. 활용 방향

◆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 강화

- ✓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OPT-OUT** 권리 보장
- ✓ 데이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 채널 신설(위원회 등) 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과정 구조화 필요

4. 결론

◆ 공공 중심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 필요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방향성을 거부하기 힘들
- ✓ 다만,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중심으로 적절한 관리방식이나 활용 체계 마련 필요
- ✓ 이 과정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건보공단 노조는 데이터 관련 정책이 어긋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지 감시 할 것임

주제발표 3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1. 산업재해 데이터? 제대로 된 생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 산업재해 관리는 제대로 된 산재통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어느 업무에서 어떤 원인의 산업재해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해외 선진국들의 통계와 비교할 때 이상한 점이 있다. 즉,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는데 사망하지 않고 다치거나 병드는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다 죽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서 얘기하듯이 근본적으로 산재 통계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산재신청 통계라는 근본적인 문제

-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가 12배~18배 은폐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 통계로 인입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산재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산재가 되는지 잘 모르고 심지어 산재신청 대상도 되지 않고(대표적으로 자영업자나 특고), 엄격한 승인기준 때문에 불승인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등의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산재신청을 한 사람 중 일부만 산재통계로 인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재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런 시스템은 국내에 없다.

②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되어야 할 산업재해 통계

- 따라서 산업재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 다치거나 병든, 사망한 노동자가 방문하거나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코드를 몇 개만 추가하면 산재통계의 기초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운영한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쩌다 다쳤는지, 질병의 경우 무슨 화학물질을 썼는지 등. 이렇게 몇 가지 코드만 넣어주면 재해 노동자가 산재인지 아닌지를 추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 데이터

① 산업재해 개인 통계가 공유되어야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에서 가공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해당 재해자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다치고 병 드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개인 식별을 하지는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세세분류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되더라도 다양한 그룹핑을 통해 재해의 양상과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②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선원연금 등 모든 재해통계가 공유되어야

- 그나마 대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산재보험은 재해보고서라도 작성해 제공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선원연금은 이조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량 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어렵고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되지 않아 통계로서의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③ 건강보험통계도 직업, 원인을 중심으로 공유되어야

- 건강보험통계도 산재통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과 원인을 중심으로 코드화 되고 개별 재해자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사업장별, 원·하청 산업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 '최악의 살인기업'이 매년 선정되고 있고 하청의 노동자가 원청의 노동자보다 8배 이상 많이 사망한다는 보도는 이제 정설로 굳어져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별, 원·하청 산업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미 이 통계는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개되어야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고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주제발표 4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현황

-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나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음.
- 오히려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는 노동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테면 적정 수의 라이더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낮은 배달료를 찾는 수단, 상점·고객에게 라이더가 도착하는 최단 시간을 찾는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플랫폼은 개별 노동자들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나 일하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적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이 같은 데이터 조차 접근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라이더가 법적권리를 주장할 때 (이를 테면 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함. (궁여지책으로 관리자와의 SNS 소통기록을 활용하고 있음)
- 나아가 이력이 증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적용에 있어 난점이 발생함.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없음)
- 심지어 플랫폼은 노동자에 대한 차단·추방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사례

- A라이더는 어느날 갑자기 카톡플러스친구 소통이 차단됨. 라이더가 회사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카톡이었으므로,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발생시, 기타 업무관련 모든 소통은 카톡으로 진행) 당사자는 상당히 큰 불편을 겪음. 이러한 차단은 4개월째 지속됨. 노조가 항의하자 사측은 뒤늦게 해당 라이더가 상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차단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함.
- B라이더는 7월 중순 경 7월말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음. B라이더는 카톡을 통해 이유를 물었으나, 상담자는 카톡상담가능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공식 이메일로 문의하라고 답변. 사측에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함. 노조가 항의하자 사측은 해당 라이더가 어뷰징행위를 했기에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답변함. 그러나 어뷰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어뷰징이 누적될 경우 계약만료 될 수 있다는 통보는 사전에 없었음.
- 두 라이더 모두 사측이 라이더에 대해 평가를 하는지,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충분한 소명절차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함.

해외의 플랫폼투명성 관련 논의

- 플랫폼투명성은 대략 디지털 환경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 데이터가 처리되고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정보 처리자, 플랫폼에게는 설명 의무), 나아가 부당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ILO, 2018)
- 플랫폼 회사는 worker가 자신을 추적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투명성 및 데이터 보호 정책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ILO, 2019)
- '디지털 노동자가 노동조건에 관해 플랫폼의 통지를 받을 권리'를, '알고리즘과 평판 시스템의 기능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를 법적 권리로 규정 (이탈리아)
- '디지털 플랫폼이 모든 직원과 협력자에게 계약 운영에 대한 예방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이탈리아 볼로냐, 2018)
- 기타 프랑스에도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법률 제정.

결론

-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같은 노동이력데이터 공개는 플랫폼노동자의 법적권리로 보장돼야 함.
- 노동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플랫폼의 노동이력 데이터는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해당 분야의 경력직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활용가능.
 - 민간손해보험 가입시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라이더의 경우 운행시간, 평균속도, 사고이력 등 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현재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전속성 (주로 한 개의 사업체에서 일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인정돼야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현실에 맞게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 과정에도 노동이력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주제발표 5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CONTENTS		
		
1 공공 데이터 이용 문제	2 정보공개 청구 보완책	3 첨언

1

국토교통부와 데이터 논박(1)

국토부의 정보 독점

2018년부터 경실련과 국토부가 다투는 주제 중 하나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문제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이 되므로 조세정의의 위해 매우 중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도 과표는 핵심
 정부는 땅(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 주택(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8% 주장
 경실련은 땅(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에 불과해 조세정의 훼손 및 부동산부자, 재벌이 세금 특혜받는다 주장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6. 24(월) / 총2매(본문2)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과장 한정희, 사무관 김세복 ☎ (044) 201-3425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경실련의 주장은 분석의 전체 및 방식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보도자료(6.24)를 통해 '19년 아파트 공시지가(땅값) 시세 반영률이 33.7%에 불과하고, 아파트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의 시세 반영률은 작년 68.9%에서 올해 65.3%로 하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실련 분석의 전체 및 방식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19. 12. 4(화) / 본문 3매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과장 신광호, 사무관 김세복 ☎ (044) 201-3425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경실련이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정부, 객관적 검증을 위해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 제안

< 관련 보도내용 (경실련, 12.3(화)) >

- ◆ 대한민국 땅값 1경 1,800조원, 민간보유 땅값은 '79년 325조원에서 '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
- ◆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공시지가는 '18년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되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천조원 상승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19. 12. 3(화) / 총 7매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과장 신광호, 사무관 김세복 ☎ (044) 201-3425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경실련, 12.3(화)) >

- ◆ 민간보유 땅값은 79년 325조원에서 '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
- ◆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공시지가는 '18년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

□ 경실련에서 10월 8일 발표한 영일 권역 부동산 가격현황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일과 다릅니다.

2

국토교통부와 데이터 논박(2)

실거래가 자료, 공시지가 자료 비교하면 시세반영률 확인 가능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해당 주소지의 실거래가 비교하면 됨
 정부는 매년 전국 3,10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고시함. SHP, CSV파일로 제공
 데이터 확인 및 분석에 상대적으로 용이

구분	시도	데이터생성명	기준일자	파일크기	다운로드	법정동명	특수지구명	특수지구명	특수지구명	특수지구명	기준년도	기준월	공시지가	공시일자	이
전체데이터	인천광역시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2	94,204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02	7	25000	2003-06-30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03	1	28200	2003-06-30	1		
전체데이터	광주광역시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2	54,065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04	1	60000	2004-06-30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08	1	20700	2008-05-31	1		
전체데이터	대전광역시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2	37,859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09	1	20700	2009-05-29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10	1	19100	2010-05-31	1		
전체데이터	울산광역시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3	62,631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11	1	20100	2011-05-31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12	1	25000	2012-05-31	1		
전체데이터	세종특별자치시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3	25,980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1월 13일	2013	1	34600	2013-05-31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2	7	25000				
전체데이터	경기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3	623,876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3	1	28200	2003-06-30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4	1	60000	2004-06-30	1		
전체데이터	강원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3	340,083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8	1	20700	2008-05-31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9	1	20700	2009-05-29	1		
전체데이터	충청북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4	297,545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10	1	19100	2010-05-31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11	1	20100	2011-05-31	1		
전체데이터	충청남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4	480,449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12	1	25000	2012-05-31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13	1	34600	2013-05-31	1		
전체데이터	전라북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4	405,867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2	7	25000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3	1	28200	2003-06-30	1		
전체데이터	전라남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4	405,867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4	1	60000	2004-06-30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8	1	20700	2008-05-31	1		
전체데이터	경상북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5	661,076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09	1	20700	2009-05-29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10	1	19100	2010-05-31	1		
전체데이터	경상남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5	593,205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11	1	20100	2011-05-31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12	1	25000	2012-05-31	1		
전체데이터	경기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5	656,565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2월 13일	2013	1	34600	2013-05-31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3월 13일	2002	7	25000				
전체데이터	경상북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5	661,076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3월 13일	2003	1	28200	2003-06-30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3월 13일	2004	1	60000	2004-06-30	1		
전체데이터	경상남도	개발공시지가정보	2020-08-15	593,205 KB	↓ CSV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3월 13일	2008	1	20700	2008-05-31	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 일반	03월 13일	2008	1	20700	2008-05-31	1		

3

국토교통부와 데이터 논박(3)

실거래가 자료, 공시지가 자료 비교하면 시세반영률 확인 가능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해당 주소지의 실거래가 비교하면 될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 실거래가 자료 역시 공개하고 있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깜깜이 공개하고 있음 해당동, 기간 제한 두고 있고, 상세 주소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음

>상세정보(해화동)

연도: [2020년] | 유형: [전체] | 연역: [전체] | 구역: [전체]

· 7월

분류	도로명	유형	용도지역	도로조건	건원/면적(㎡)	계약일	거래금액(만원)	층	건축년도	전상공부
해화동	향정공로 6*	일반	일반상업	25m이상	104.33	17	44,100		1982	보기
		업무	업무							
해화동	향정공로 6*	일반	일반상업	25m이상	122.31	17	52,600		1982	보기
		업무	업무							
해화동	향정공로 6*	일반	일반상업	25m이상	226.64	17	95,000		1982	보기
		제2종근린생활	제2종근린생활							

용도지역	도로조건	계약년월	계약일	계약면적(㎡)	거래금액(만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5m이상	202007	9	186.9	29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m미만	202007	10	473.7	1,23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m이상	202007	15	56.98	218,000
개발제한구역	-	202007	20	231	11,700
개발제한구역	-	202007	29	331	30,000

4

누구를 위한 공공데이터 인가?(1)

“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 관련
다양한 데이터 제공
”



- GIS건물정보**
부동산 종합정보에서의 GIS건물통합정보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속성정보를 통합한 정보의 지리데이터에서 생성된 맵 이...
[다운로드] [CSV] · 최근생성일: 2020-04-10 · 다운로드수: 21905 ·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 개발공시지가정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정보
[다운로드] [CSV] · 최근생성일: 2020-08-16 · 다운로드수: 52234 ·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 개발주택가격정보**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에 단독주택에 고시한 가격정보의 지리데이터에서 생성된 맵 이미지와 도형 및 속성값을 포함한 피쳐 집합을 제공...
[다운로드] [CSV] · 최근생성일: 2020-08-13 · 다운로드수: 11129 ·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 공동주택가격정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에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의 지리데이터에서 생성된 맵 이미지와 도형 및 속성값을 포함한 ...
[다운로드] [CSV] · 최근생성일: 2020-07-29 · 다운로드수: 12111 ·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 도서정보**
우리나라의 도서에 대한 도서명칭, 구분유형, 연결유형, 계량다리 등에 대한 정보
[다운로드] [CSV] · 최근생성일: 2020-08-01 · 다운로드수: 1107 ·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 부동산개발업정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
[다운로드] [CSV] · 최근생성일: 2020-08-18 · 다운로드수: 5629 ·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 부동산중개업정보**
타인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업체에 대한 정보
[다운로드] [CSV] · 최근생성일: 2020-08-17 · 다운로드수: 6613 ·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 토지소유정보**
토지대장부에 등록된 토지의 상태 및 소유상태에 대한 정보
[다운로드] [CSV] · 최근생성일: 2020-07-04 · 다운로드수: 31513 · 서비스유형: 다운로드

- 건물정보
- 부동산가격정보
- 개발주택가격정보
- 공동주택가격정보
- 도서정보
- 부동산개발업정보
- 부동산중개업정보
- 토지소유정보

7

누구를 위한 공공데이터 인가?(4)

KEY값 뽑아내기

그러면 이제 지오폴딩을 위한 첫번째 작업, 11개 데이터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주소들의 고유값들을 추출한다.

먼저까지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key값을 만들어낸다.

[시군구 이름] + '~' + [본번 네자리] + [부번 네자리]

데이터에 시군구라고는 써있지만 실제로는 읍면동리 수준까지 있다.

key 값을 만들 때 구분자(여기서는 tab 문자)를 넣어두면 나중에 다시 분리하기 편하다.

그리고 보통은 공마를 구분자로 많이 쓰는데, 문자열 안에 공마가 포함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tab을 쓰는 것을 권장한다. 거의 대부분의 문서 안에 tab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거려가 데이터는 공마를 구분자로 사용하면서도 tab이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다)

```
307797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054700194
307798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054700794
307799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055800164
307800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090500004
307801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090600004
307802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105200004
307803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106300004
307804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119100004
307805 충청북도 증주시 호암동 210200004
```

NO.	개발유형	시재명	비용가	개발자
1	웹사이트	래저업	비용가	정연우
2	코퍼레이션	부동산데이터	비용가	박영지
3	웹사이트	포그업	비용가	(주)포그업
4	코퍼레이션	부동산데이터	비용가	(주)온유
5	웹사이트	탐플업	비용가	탐플업
6	웹사이트	부동산데이터	비용가	박성우
7	웹사이트	허우스리치	비용가	박지호
8	코퍼레이션	현대캐슬	비용가	Lesson
9	웹사이트	대구달방	비용가	김기석
10	코퍼레이션	발플업	비용가	(주)발플업시스템즈

◆ 정보 이용 한계

복잡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픈API 활용하는 기관은 대부분은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성 떨어짐

시민을 위한 정보제공이 아닌 영리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

8

소결



◆ 제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길...

지금과 같은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접근 편의를 위해 CSV, SHP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안.

TXT파일로 제공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 없음. 실거려가 정보보다 더 큰 공시지가 자료 또한 쪼개서 공개.

9

국책사업 공사비 공개

아파트 분양원가, 관급공사 공사비

-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LH, SH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진행.
- 경실련은 공공건설산업 정상화 위해 대형 국책사업, 민자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예산감시운동 진행.
- 국책사업 감시 위해서는 공사비 내역서 확보 필요 하지만 각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있다며 비공개



10

비공개로 일관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시민이 공공기관의 공사비 집행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유일한 방안. 하지만 공공기관은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거부 처분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법 제9조 제1항 제7호임. 정확히 어떤 부분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않음. 행정소송하라는 설명이 전부. 같은 청구 내용인데도 어떤 기관은 공개 어떤 기관은 비공개.

이익신청내역

<p>이익신청 내용</p>	<p>귀서는 도급내역서 감지(최초, 최종)에 대해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도급내역서 감지는 귀 사의 임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된 수급업체가 각 공정별 금액을 기입한 내역에 불과합니다. 귀사가 비공개 사유로 언급한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한은 실제 시공 단가를 말합니다. 실제 시공 단가는 원도급 업체와 실제 시공을 담당한 하도급업체의 세부 시공단가를 알아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을 비교분석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구자는 도급내역서 세부내역이 아닌 도급내역서 감지(최초, 최종)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단가와 물량 등 세부 내역이 나오지 않는 도급내역서 감지만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p> <p>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는지 여부를 미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귀사의 비공개 주장이 타당하리만, 도급내역서 감지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비공개 사유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청구자는 구체적 사유를 분기 위해 귀사 정보공개 담당자와 6월 12일 유선통화했으나, 담당자는 단순의 업무매뉴얼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라고만 답해왔을 뿐 비공개 사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p> <p>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도급내역서 감지'는 귀사의 낙찰지 선정방식에 따라 일정한 수준으로 시공단기(원가치 아닌)를 환산해 금액을 산출한 내역으로 도급업체들의 원가 정보도 아니고 어떠한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도급내역서 뿐 아니라 하도급 세부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경기도 시공사는 원도급, 하도급 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수많은 이익제기에 시달려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점만 비추어본다라도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 세부 내역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다 하더라도 귀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구자가 청구한 내역은 '도급내역서 감지'이기에 더더욱 귀사의 비공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타 청구로부터 정보공개받은 도급내역서 감지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p>
<p>비공개대상사유</p>	<p>귀역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익신청 관련입니다.</p> <p>귀역의 이익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거 정보공개신청여부를 개척하였으며, 그 결과 귀역의 이익신청은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로 기각되었음을 통지합니다.</p> <p>아울러, 이익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동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p>

11

법원은 일관되게 공개하라 판시

행정소송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공사비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음. 경실련은 공사비 관련하여 수 차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고 판시함. 법원의 주문은 명확함. 공공 공사비 내역은 기업 영업 비밀 아니며,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국민 알권리 우선.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08누324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피고, 항소인 에스에이지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빛지 목록 기재 각 사업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들 기각한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대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계연성이 있다는 경우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그리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12

소결

정보공개 청구

기관별 상이하지만, 공공기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리기업과의 계약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음.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축되는지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줘야 함.

시민이 정보공개를 위해 행정소송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 따름. 유사한 판례가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정보공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정보공개 내용 역시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할 필요 있음.

본시행 광주시내 건설대체주택도(1)공공-역정1인실공사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총	13,822,163,888	786,941,138					
2. 하도급내역	1,788,871,486	361,282,287					
3. 하도급	2,146,053,282	785,594,885					
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 하도급	26,367,027,142	528,723,044					
6. 하도급	26,367,027,142	528,723,044					
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3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4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6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7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0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총	13,822,163,888	786,941,138					
2. 하도급내역	1,788,871,486	361,282,287					
3. 하도급	2,146,053,282	785,594,885					
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5. 하도급	26,367,027,142	528,723,044					
6. 하도급	26,367,027,142	528,723,044					
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7.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8.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19.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0.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1.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2.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3.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4.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5.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6. 하도급	2,039,025,287	1,227,289,375					
27. 하도급	2,039,025,287	1,227,2					

전체토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참가자 전원

13

첨언(1)

빅데이터 활용해 국민 신뢰 회복 및 예산 절감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는 부동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세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매년 3,000억원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공시지가 조사하지만 깜깜이 발표. 세부산정내역 비공개.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 및 정치적 논쟁 줄일 수 있음.

김진경 빅밸류 대표, 감정협회 고발에 "혁신 가로막는 건 사회적 손실"

주소	도로명	지번	주책명
	서울특별시 중구 해운로 16길 17	원스톤 빌리지 (401)	원스톤 빌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해운동 5-10	(401)	
시세 (1㎡당 시세)	583,440 원 (7,669 원/㎡)		공용주택 공시가격
	내역: 기준일: 2020.01 / 시세 확보일: 2020.08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전용면적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76.08㎡	4층
	면적 합산	76.08㎡	
공용면적	다세대주택/개단실/ELEV	8.94㎡	각층
	면적 합산	8.94㎡	
대지관련면적	58.64㎡		

14

첨언(2)

공공공사비 공개해 지자체 예산 절감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세부 공시비 내역서를 공개하고 있음.
 이로 인한 법적 시비는 한 차례도 없음. 경기도는 공공공사비 공개 및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책 구상 중.
 타 기관 및 지자체 역시 타당치 않은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상시 정보공개 통해 예산절감 노력 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 | 일자리 | 사업정보 | 분양안내 | 고객마당 | 정보마당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

▶ 정보마당 >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

총 89건, 1/9 페이지

번호	제목	바로 보기	사업기간
89	남양주 다산 지금1초등학교 전기공사	Q	2020-06-24 ~ 2021-08-23
88	남양주 다산 지금1초등학교 건축공사	Q	2020-06-09 ~ 2021-08-08
87	연천(세은)농업진흥단지) 부차전기공사	Q	2020-05-21 ~ 2021-07-11
86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시설 소방 공사	Q	2020-04-09 ~ 2021-05-08
85	동탄(2)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 관리공사	Q	2020-04-06 ~ 2022-04-05
84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진입도로 개설공사	Q	2020-04-06 ~ 2022-04-06

메뉴: 권리 창출비전, 일자리정보, 주거복지, 택지개발,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 주택사업, 위수복합망사업, 도시재생사업, 분양진행 및 계획, 불만처리, 분양권(과)공고, 분양권(과)유령이, 주택사업, 신기술제품입찰, 여성기업제품 홍보,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온라인 도민생각, 도시재생대학 수강, 설문조사, 건설 고객제안, 고각과의 약속, 자주는는 질문, 고각의 소리, 고각채널안내, 홈페이지 개선의견, 신기술제품입찰, 여성기업제품 홍보,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온라인 도민생각, 도시재생대학 수강, 설문조사, 건설 고객제안, 정보공개, 시민정보 공표, 공공(과)터 개발, 공사현장, 입찰정보, 건설정보, 건설정보, 보충정보, 판매법령, 권역서시자료실, 입찰(과)지드, 공사관련규정, 국외출장자료실, 실적공명서 발급